LG의 현대인수 정치적 배경은?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이 2월27일 우리은행에서 전체 채권단 회의를 열고 호남석유화학-LG화학 컨소시엄과의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을 통과시켰다. 현대석유화학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받은 뒤 성공적으로 매각된 첫 사례가 됐으니 축하할 일이다.

더군다나 채권단 회의에는 58개 채권기관 중 47개가 참석해 전체 채권기관의 78%, 담보 채권기관의 94%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원래는 제2 금융권 채권단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우리은행 등 은행권 담보채권기관이 손실분담 차원에서 회수금액의 10%를 투신 등 무담보채권기관에 떼어주기로 하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석유화학 매각을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안팎에 도사리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런 문제없이 매각이 성사됐다면 다행이련만 안타깝게도 정치적 거래의 흔적이 보이고,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중립적 입장이어야 할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의 LG-호남 컨소시엄 인수가 타당하다는 발언이 그렇고, Koch의 인수안이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도 그렇다.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고,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현대석유화학 매각과 관련 LG-호남 컨소시엄을 인수자로 선정한 기준을 밝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의혹이 한결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석유화학협회가 그러하지 못했고, 우리은행도 선정기준을 밝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 그러할까? 우리은행은 Koch가 제시한 인수조건을 받아들이면 부채탕감 없이 2조3000억원 전액을 2007년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화학경제연구원(CMRI)의 분석보고서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Koch의 마지막 변경 인수제안 내용 및 LG-호남 컨소시엄을 인수기업으로 선정한 납득할만한 이유 및 기준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M&A가 어린아이 장난도 아닌데 그런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이유가 없다』며 항변했다.

화학경제연구원 분석내용이 사실과 틀리다면 어느 부문이 어떻게 틀렸는지 지적하지 않고 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힐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을까? 밝히지 못할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떳떳하다면 공개적으로 밝히고 반반하면 되는 일 아니던가!

또 『제2 금융권 등 채권단에게 컨소시엄 선정기준을 설명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투신권 채권단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저널 기사 때문에 매각이 결렬되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항의함으로써 선정기준이 투신권 등 제2 금융권 채권단에게는 납득되지 않았음도 시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석유화학협회 박훈 상근부회장이 LG-호남 컨소시엄 인수가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점을 LG-호남 컨소시엄 선정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석유화학협회는 『LG-호남 컨소시엄 인수가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고, 또 LG화학 성재갑 부회장이 석유화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협회 관계자가 객관적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석유화학협회는 2월20일 제14대 회장으로 성재갑 회장(LG석유화학 회장)을 재선임했고, 성재갑 회장은 앞으로의 과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유화학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무엇인가 연결되는 구석이 있는 대목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월26일 사정의 속도조절을 강조함으로써 검찰의 SK 및 한화 수사가 LG 및 삼성그룹으로 튀지 않게 방어(?)한 점을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벌들이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 앞에 숨죽이고 있는 판에 갑자기 뛰어나온 속도조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강하고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불법과 편법을 차단하겠다고 나서 재벌비리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정속도 조절을 강조함으로써 LG · 삼성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와 불법 · 편법상속 수사를 가로막고 보호하는 양상을 띠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우리은행 등 금융권과 재벌들은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경영 행태로 IMF 국가위기를 불러온 장본인들이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150조원 넘게 꿀꺽 삼킨 처지가 아니던가.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이 재벌들의 불법·편법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고 은행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3/3/10>